

2025. 10. 31.[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 의원실) 010-2763-5393

2025 乙을 위한 국정감사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

2025년 10월 31일 (금) 0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0월 31일(금)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5 을을 위한 국정감사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의원, 김문수 의원, 박홍배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MBK의 홈플러스 사태 ▲배달·플랫폼 불공정 구조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계약 ▲기술탈취 및 하도급 착취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외투기업의 노동권 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학교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세종호텔 고공농성 사태 등 ‘을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의 2025년 국정감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몰염치함에 맞서 을들의 인간다움을 되찾기 위한 숨가쁜 여정이었다’며 “을지로위 질의서에는 늘 사람의 냄새가 났고, 민생의 고달픔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로위는 올해 민생국감에서 제기한 과제들에 대해 입법,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 기자회견 사진

첨부 1 : 2025 乙을 위한 국정감사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첨부 1. <기자회견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감 질의서에는 ‘사람’ 과 ‘민생’ 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민병덕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0월 1일 국정감사 민생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MBK 홈플러스 사태, 플랫폼불공정, 가맹점·대리점 문제, 배달플랫폼, 기술탈취, 전세사기, 외투기업, 택배과로사, 학교급식, 세종호텔 고공농성까지….

을지로위원회는 이 민생과제들을 국감에서 치열하게 지적했고 집권여당으로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바로 이어갈 것이라는 점,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 2025년 국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몰염치함에 맞서’ 을 ‘들의 인간다움을 찾기 위한 한달 간의 숨가쁜 여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지로위원 국감 질의에는 어김없이 사람 냄새가 나고 민생의 고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만명이 넘는 시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MBK 앞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탐욕 앞에서,

청년의 일상을 앗아간 전세사기의 잔혹함 앞에서,

경쟁에 쫓겨 목숨을 걸고 일하는 배달노동자와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노동자의 신음 앞에서,

외투기업 문제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앞에서,

200일이 넘게 고공농성을 해도 끄떡 않는 세종호텔의 냉담함 앞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입법을 통해 개선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경영효율’ 이 되고, 불공정한 계약이 ‘비즈니스 모델’ 이 되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혁신’ 으로 포장되는 현실에 맞서 을지로위원회는 을과 함께 바뀔 것입니다.

그럼, MBK 홈플러스부터 국감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BK-홈플러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이 홈플러스 회생 신청의 이유였다는 MBK 기존의 주장을 홈플러스 내부 녹취록을 근거로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 MBK가 애초부터 홈플러스 점포를 통한 부동산 장사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공단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MBK 김병주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전단체 사기 발행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MBK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MBK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가 9천억원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잘못된 투자였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MBK의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적극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발표하는 등 MBK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플랫폼불공정〉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형 배달플랫폼들의 독과점 집중과 이윤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쥐어짜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온라인플랫폼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무료배송’ 은 배달비의 80%를 자영업자에게 전가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023년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4127억원을 배당한데 이어 24년에는 딜리버리 히어로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여 현금 5,32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에 쿠팡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배민의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지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추진 경과가 없음을 질타하고 신속하게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법안 제정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졌으니, 대형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가맹점.대리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갑질 행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서 본사의 횡포와 정보 불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맹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더본코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돌려막기식 브랜드 확장으로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오너리스크가 가맹점 피해를 키우고 있으며, 동일 본사 브랜드 간 출점 경쟁으로 점주 간 출혈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 실질 점점 강화, 오너리스크 관리 의무화, 브랜드 난립 제한, 정보공개서 갱신 주기 및 내용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 비대칭 완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굽네치킨, 명륜진사갈비, 교촌치킨, 더스윙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굽네치킨의 상품권 수수료 전가 및 자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명륜진사갈비의 불법 대부업 정황,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더스윙의 불법 영업 구조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별 사건에 대한 중재 및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감시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본사 중심의 이익 구조가 더 이상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한 갑을 구조를 바로잡고,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공정 거래구조, 소비자 기만행위, 자영

업자 착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두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광고비를 전가하고, 한그릇배달·쿠팡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입점업체 간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플랫폼 수수료율은 2022년 5~15% 수준에서 2025년 25~30%까지 상승해, 음식값의 약 3분의 1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악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배달앱 상생안은 실질적인 상생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 인상을 정당화한 면죄부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수수료 부과와 CPC 광고정책으로,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 부과로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중 배달앱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전가·광고비 과다·할인 강요·알고리즘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제도개선의 핵심 과제로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달플랫폼들이 을지로위원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회피하고 상생안을 미룬다면, 정기국회 내 입법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거래공정화법 제정과 더불어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 표준계약서 의무화, 입점업체 선택권 및 협상권 보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탈취〉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의 심각한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5,442억 원, 피해 건수는 299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기업은 21.9%에 불과하고, 실제 손해배상액은 피해 규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운영, 피해구제 절차 개선, 예산 확충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한제분-세븐브로이 사례를 통해 협업이 중소기업의 도약이 아닌 몰락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세븐브로이는 협업 종료 후 수백만 원을 폐기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

고, 보복성 소송까지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세븐브로이 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혁신 생태계와 공정한 산업구조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피해기업이 신뢰 속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보완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했던 ‘전세사기 물렸거라’ 부스에서 피해자들이 절절하게 외쳤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요구와 “복불복 인생이 아닌 최소보장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 “보증자리가 못자리가 되지 않게 관심 가져 달라”는 목소리를 국토부 장관에게 전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했던 ‘최저보증금 선지원제도’ 신설과 지역 간 불합리한 최우선변제금 기준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인력 증원 △배드뱅크 설립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전세금 보증 한도축소와 인정감정평가제도의 부작용 점검 △AI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실효성 강화 △HUG ‘안심전세앱’ 신뢰도 제고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서 행정의 직무유기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피해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내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도화하고, 내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예방책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투기업〉

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 행각을 지적하고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니토옵티칼은 일본계 다국적기업 니토덴코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입니다. 같은 니토덴코의 국

내법인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2년 공장 화재 이후 노동자들이 해고된 후, 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과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해고된 노동자 최종 7인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긋납니다.

이배원 대표이사에게 그간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 두 자회사와 기술교류는 물론 전적 등 인사교류를 해 온 점을 강조하며 600일 넘은 고공농성과, 대통령, 정부, 국회의 거듭된 고용승계 요구 현황을 본사와 정확히 소통하고 고용승계에 대한 전향적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택배과로사〉

야간(22시~06시)노동 중 산재사망을 전수 분석하여, 연간 200명이 넘는 분들이 야간노동으로 숨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야간 사고사망 1위 직종은 화물차·택시·퀵서비스 기사 등 '운전·배달 종사자'였으며, 야간 과로사 2위 직종도 운전·배달 종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밤새 배달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시간의 고정적이고 연속적인 야간노동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시장 논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노동자의 건강권 사이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외국계 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기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실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를 통해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임금 대비 최대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며,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방학 중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방학 중 무임금 실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는 지적과 함께,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2월부터 생활안정기금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적용해, 방학 중 보수 73만 원에 생활안정기금 30만씩을 두 번 지급하면, 방학 기간 보수가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수의 교육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교육부 차원의 전국 실태조사 예산 반영과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예산 분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호텔〉

세종호텔 고공농성의 조속한 해제와 실질적 복귀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10월 14일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추가 교섭 일정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간 면담에서 사측은 추가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복직 전제 원칙을 유지하여 접점 형성 실패했습니다.

안전과 생계가 달린 사안인 만큼, 노조의 복직 원칙을 존중하되, 회사의 운영상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노동부가 단순 중립자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 갈등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중재를 통해서 11월 재교섭을 성사시킬 구체적 일정과 절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복직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실행(교육·재훈련 → 한시 재배치 → 평가 후 정규 배치) 등을 비롯한 중재안을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위로금·소송비 정리를 패키지로 묶고, 상호 소송·손배 종결 원칙을 포함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노조의 복직 요구를 존중하되 사측의 운영상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절충이 필요합니다. 교섭절차 재가동과 고공농성의 안전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종대학교 이사회의 사회적 책임 방기와 구조적 비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교육부 특정 감사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세종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세종호텔의 노사 갈등을 방치한 결과,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261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를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책임 방기입니다.

세종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문제의 세종호텔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대는 학교의 재정 상황 등을 사유로 2025년 학생등록금 2.5%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그간 세종대는 교육용 토지로 사들인 성남시, 창원시, 화성시 등 무려 33만평의 땅을 방치해왔고 세금 감면 혜택도 누려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창원시 등 일부 지역에 땅 투기를 해온 의혹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세종대와 관련한 비리와 전횡의 중심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특정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세종대의 재산 운영에 대한 교육부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학교 내외의 갈등을 매듭짓고 학생을 위해 세종대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끝까지 쟁기겠습니다.(끝)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